|  |  |
| --- | --- |
|   |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
| **2013년 9월 12일**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
| **총 3장** | **담당: 홍보실 김성연 연구원** |
| **전화: 02-3701-7349****010-8867-0767** | **이메일:** **sungyeon@asaninst.org****communications@asaninst.org** |

**아산정책硏,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모의 논란 및**

**국정원 개혁 관련 여론조사 실시**

**이석기 의원 국회 제명 주장에 동의 69.7%, 동의 않음 17.8%**

*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 여론연구센터는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논란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68.1%의 응답자가 내란모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란모의 논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74.3%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이석기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6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종북세력으로 비난 받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보는 비율은 38.6%였다. 다수인 41.8%는 모른다고 답해 응답을 유보했다.
* 한편, 내란모의 수사가 국정원 개혁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45.5%,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5.6%였다. 82.8%에 달하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내란모의 수사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도 국정원 개혁이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 김지윤 여론연구센터장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다수였고,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높았다.”며 “국민들은 두 이슈를 별개의 독립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란모의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별개로 취급하며 두 사건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였다.

|  |
| --- |
|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  |
| --- |
| **참고 자료**  |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조사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됐습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입니다.

**주요결과**

* **이석기 의원 내란모의 논란 인지도: 알고 있다 68.1%, 모른다 30.1%**
*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74.3%, 동의하지 않음 19.8%**

이번 내란모의 논란을 알고 있다고 답한 681명에게 이석기 의원의 내란모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자 74%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내란모의 주장 동의여부는 이념성향별로 상이했다. 진보층은 60.2%가 동의(동의 않음 33.1%), 중도층은 72.7%가 동의(동의 않음 22.1%), 보수층은 82.0%가 동의(동의 않음 14.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석기 의원 국회 제명: 동의함 69.7%, 동의하지 않음 17.8%**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69.7%의 국민이 이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85.6%가 이 의원의 국회 제명을 동의했다(동의 않음 6.8%).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64.8%가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동의했다(동의 않음 25.8%). 무당파의 55.1%가 동의, 24.2%가 동의하지 않았다.

*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56.2%, 동의하지 않음 31.1%**

통진당 해체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56.2%로 앞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여타의 주장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과반이 넘는 국민은 이 의원의 내란모의 논란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수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보수적 이념성향을 가질수록, 새누리당 지지층일수록 통진당 해체 주장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별 통진당 해체 주장 동의 비율: 보수 73.2%, 중도 51.7%, 진보 39.9%)

(지지정당별 통진당 해제 주장 동의 비율: 새누리당 지지층 76.8%, 민주당 지지층 40.4%)

* **야권연대책임론: 동의함 49.4%, 동의하지 않음 36.8%**

이번 논란이 야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야권연대책임론에 동의하는 비율은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49.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 역시 상당히 높은 36.8%였다. 연령대별 야권연대책임론에 동의하는 비율은 20대 43.0%(동의 않음 44.2%), 30대 43.6%(동의 않음 47.0%), 40대 37.8%(동의 않음 51.1%), 50대 61.8%(동의 않음 25.8%), 60세 이상 62.5%(동의 않음 14.0%)였다. 4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야권연대책임론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면, 50대 이상은 야권연대의 공동 책임으로 보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았다.

* **통진당 종북세력 정치인에 대한 의견: 안보 위협하는 반국가세력 38.6%, 반국가세력 아님 18.5%**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김재연, 김미희 의원 등 종북세력으로 비난 받는 정치인과 통진당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국민은 38.6%였다. 최근 언론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종북 때리기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고도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비율이 41.8%로 가장 많았다. 많은 응답자가 종북세력으로 지목 받은 인물과 조직에 대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기보다는 21세기에도 내란모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이념논리에 빠진 인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내란모의 수사가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45.5%, 동의하지 않음 35.6%**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모의 수사가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45.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35.6%보다 높았다. 국정원 개혁논의 회피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은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층의 30.7%(동의 않음 51.7%)만이 동의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7.1%(동의 않음 21.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파층은 동의 51.3%, 동의 않음 25.4%였다.

*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견: 중요하다 82.8%, 중요하지 않다 9.0%**

내란모의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도 국민의 대부분인 82.8%가 여전히 국정원 개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상관 없이 다수의 국민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 **국정원 국내 정보 부문 개혁에 대한 의견: 현행 유지 29.9%, 최소기능 유지 35.0%, 전면 폐지 8.3%**

이번 내란모의 논란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에 대한 개혁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35.0%의 국민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정보 업무에 대해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두고 대폭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9.9%였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 조사관련 문의: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